



의안번호

제89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17. 10. 17.

논산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안 번호	제89호
----------	------

제출연월일 : 2017. 10. 17.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주)디디에스에서 입안 제안한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466-8번지 일원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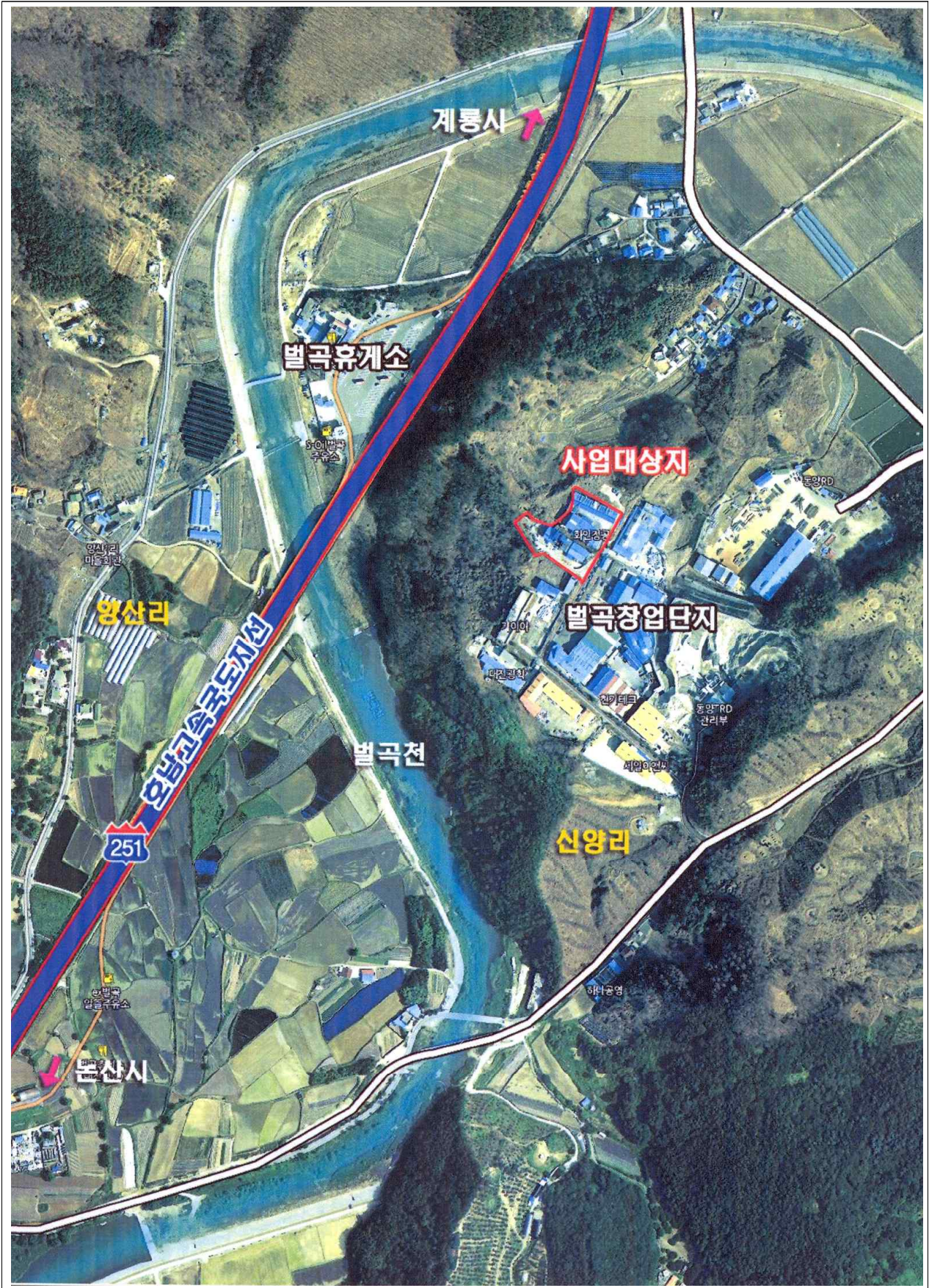
2.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논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 위 치 :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466-8번지 외 1필지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면 적 : 6,329m²
- 사업시행자 : (주)디디에스(대표이사 안재찬)
- 주요 결정사항 ⇒ 시장 결정사항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 처리시설 신·구 대조표

구 분	당 초	변 경
폐기물 종류	6종(병리, 손상성, 조직물류, 혼합의료 폐기물, 폐합성수지, 거즈/탈지면/기저귀)	7종(병리, 손상성, 조직물류, 일반의료, 혈액오염, 격리의료, 생물·화학폐기물)
면적	3,370m ²	6,329m ²
용량	9.84ton/일	36ton/일

[위치도]



3. 추진경위

- 2013.12.20. :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주민제안
- 2014. 3.27. : 입안 미반영 통보
- 2016.10.17. :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기각(논산시 패소, 붙임 1. 참조)
- 2016.12. 1. :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입안서 제출
- 2017. 3. 8. ~ 5. 2. : 논산시 관계부서(기관) 협의
- 2017. 6. 9. : 관계부서(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 2017. 6.26. ~ 7.19. : 주민 공람·공고
- 2017. 8.11. : 주민 공람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 2017. 10. :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
- 2017. 11. :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 논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환경기초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폐기물 처리시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별곡면 신양리 466-8번지 일원	-	증) 6,329	6,329	-	소각시설 (36톤/일)

(2)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폐기물 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위치 : 별곡면 신양리 466-8번지 일원 - 면적 : 6,3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설이 노후화되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분능력 시간당 1.5톤의 최신설비 및 방지시설 교체 설치를 통한 의료폐기물 소각 시설 신설

5. 관련기관(부서) 협의

- 협의기관(부서)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외 18개 부서 및 기관
- 협의기간 : 2017. 3. 8. ~ 2017. 5. 2.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 2. 참조

6. 주민 공람 · 공고시 의견

- 공람기간 : 2017. 6. 26. ~ 2017. 7. 19.
- 제출장소 : 논산시청 도시주택과, 벌곡면사무소
(대전일보, 중부매일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 3. 참조

7. 종합검토의견

- 본 건은 현재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 중인 (주)디디에스에서 기존 용량의 약 4배 증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써,
- 관계부서(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결과, 주민과 제안자 사이 이견을 보이는 환경오염, 농작물 피해, 주민건강 등에 대하여 대화·지원을 통한 합리적 방안과 객관적 근거자료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추후,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로 인한 종합적인 영향(환경, 농업, 주민반대 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8. 기타사항

- 붙임 : 1. 대법원 판결문 요지
- 2.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3.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붙임 1] 대법원 판결문 요지

처분사유	판결내용	비 고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도시기본 계획과 부합하지 않음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방향과 미래 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 지침이 되는 장기적·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으므로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함	
· 금강유역환경청 관할 의료폐기물 발생량과 처리용량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시설의 증설이 불필요	· 전국 의료폐기물 대상사업, 국가단위 수급 조절, 장래 수급균형 확보 어려움 등을 종합할 때 처리 능력이 발생량을 상회한다는 것만으로 증설이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환경오염 및 주거환경, 지역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쳐 입지여건이 부적합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시간당 1t 이상, 금강유역 환경청 변경허가, 주민피해 객관적 자료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에 정당 성과 객관성이 결여됨	
· 논산시의회, 별곡면민, 논산시 도시 계획위원회 등이 반대	· 인근주민의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 자료 없는 점, 의회나 도시계획위원회 반대도 타당한 기준없이 일반적이고 주관적인 감정과 예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려움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 제1,2,3호 위반	· 대기오염 방지시설 계획, 대기환경 기준치에 적합한 사실, 식재계획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 ‘논산시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 처리업 업무처리 변경기준 고시’와 상충	·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행정조직 내 사무처리 기준으로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음	
· 용수 미확보에 따른 입지 부적합	· 현재 지하수 관정 이용 및 개발 가능, 논산시 상수도계획을 통해 용수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되지 못함	
· 폐기물관리법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시간당 1t 이상의 소각시설 갖추 필요 없음	· 소각시설 신규 설치시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예 따라 시간당 처분능력 1t 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증설이 부득이 함	
· 불소 등에 따른 토양오염 발생으로 수질에의 악영향	· 오염된 토양 채취장소, 폐수 외부업체 위탁처리 계획을 보면 수질이나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폐기물처리시설 교체시 소요기간은 약 3개월이면 충분	· 기존 주장과 차이가 있어 믿기 어렵고, 검증 되지 않은 자료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것이 아님	

[붙임 2]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금강유역 환경청 (환경관리과)	○지하수법에 의해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해당법률 저촉여부 및 공업용수 확보 방안 검토가 필요함	○소각시설 용량증가에 따른 공정용수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관정:90m³/일)를 이용할 계획이나, 행정소송 제1심 판결문 P.23에서 보듯이 “원고 사업장 부지 내에서 약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1일 30m³ 이상의 양수 능력이 있는 지하수 관정 개발이 가능한 사실, 논산시는 2020.12. 준공을 목표로 논산시 벌곡면, 양촌면 일대에 총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와 같이 당사 부지 내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차후 상수도 보급계획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용수확보방안이 확립되어있음.	반 영
금강유역 환경청 (환경평가과)	○계획수립 면적이 6,329m²(도시지역)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제43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또한, 소각용량은 1,500kg/h(36톤/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
육군 항공학교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위치 판단결과 논산비행장 비행안전구역으로부터 약 400m 이격되어 있음에 따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달함	○해당사항 없음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해당 지역은 공사(公社)관리구역이 아니고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없으므로 별도의 의견이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전략기획실	○중장기 발전계획(논산시 미래발전 종합계획)의 목적은 논산시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을 도출하는 것으로 상기 사업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됨	○해당사항 없음	-
100세행복과	○관련 토지내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경우 관할행정기관에 개장신고를 먼저 해야함 ○관련 토지내 분묘조사를 실시하여 유언분묘 발견시 분묘의 연고자와 협의하여 개장신고 후 개장토록하고, 무연분묘는 제반절차(신문공고,개장안내 등)를 거친 후 개장허가를 받고 분묘를 개장해야함	○관련 토지내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경우 관할행정기관에 개장신고를 하도록 하겠음 ○유언분묘 발견시에는 분묘의 연고자와 협의하여 개장신고 후에 개장토록 하겠으며, 무연분묘는 제반절차를 거친후에 개장허가를 받고 그 분묘를 개장하도록 하겠음.	반 영 반 영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100세행복과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등) (※사업시행자는 무연고 분묘로 추정되는 분묘와 및 그 주변의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별초, 별목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판정받기 어려움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업 소재지 분묘 조사시 분묘의 사전(현장)모습을 사진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개장공고는 공고 당시 등기부등본상의 토지소유자가 해야함	○분묘 발견시 개장공고는 공고 당시 등기부등본상의 토지소유자가 하도록 하겠으며, 무연고 분묘로 추정되는 분묘 발견시 주변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분묘의 사전(현장)모습을 사진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음.	반 영
	○매장, 봉안, 화장, 자연장 등은 장사등에관한 법률 등에 의거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신고,허가등완료) 장사시설(묘지,봉안시설 등)에 장사를 해야함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장, 봉안 화장, 자연장 등이 필요할 경우, 적법한 행정절차 (신고, 허가 등 완료)를 이행한 후, 장사시설(묘지, 봉안시설 등)에서 장사를 하도록 하겠음.	반 영
	○관련 토지가 행정절차를(신고,허가 등) 이행한 장사시설인(개인,가족,종중 등의 사설묘지 또는 사설봉안당 등)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관할행정기관에 장사시설 폐지신고를 해야함	○본 사업지의 토지는 공장용지로서 장사시설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
문화예술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사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견신고 등 적법 절차 이행하여 주시기 바람	○공사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견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반 영
환경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 대상임(인허가 기관:충청남도청)	○금회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에 따른(금강유역환경청 허가번호 제 중(의료)-4호 2013년 11월 27일) 「대기 환경보전법」 제 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충청남도 제 6-대-13호 2013년 12월 2일)를 득하였음. -발생량 : 16.99톤/일 →56.62톤/일	반 영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건설업 1,000㎡ 이상) 신고 대상임	○본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3호의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이므로(건설업 : 1,000㎡ 이상) 사업시행 전에 논산시장에게 신고를 득하고 공사착공 하겠음.	반 영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 대상은 아니나, 동 사업에 관련한 기계·기구 등의 가동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본 사업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 대상 사업이 아니며,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내부에 소각설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소음·진동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반 영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특정장비 5일 이상 사용시 특정공사 신고 대상임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특정공사 사업장이며(토공사·정지공사 : 1,000㎡ 이상),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9호의 규정에 따라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5일이상 사용할 경우 공사 착공전에 논산시장에게 신고를 득하고 공사착공 하겠음.	반 영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환경과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대상임(인허가 기관:충청남도청)	○금회 폐기물 처분업 변경허가에 따라 폐수 배출시설 변경(충청남도 제 6-수-13호 2013년 12월 2일)신고를 득하였음.	반 영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된 인접 및 연접부지의 개발사업자 및 개발 시기가 같은 경우로 총 개발면적 계획관리 지역이 10,000㎡ 이상일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임	○사업부지 면적은 6,329㎡로 대상계획 면적이 계획관리지역내 1만㎡ 미만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2항 별표2와(전략환경영향평가) 동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의(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반 영
	○ 「건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착공에서 완료까지 5톤 이상 건설폐기물 배출시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하여야 함(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임-금강유역환경청)	○건설공사(소각시설 폐쇄 및 증설)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논산시장에게 신고하겠음.	반 영
	○ 「하수도법」 제34조에 의거 발생오수를 산정하여 용량 적합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후 준공을 득하여야 함	○동 사업시행으로 근무인원의 증가는 없으므로 기존 오수발생량(0.64㎡/일)과 동일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독정화조(신설)를 활용하여 오수를 처리할 계획임. ○또한, 정화조 설치시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정화조 설치 신고를 하겠음.	반 영
	○(주)디디에스 사업장은 별곡면 신양리, 양산리, 한삼천리 및 호남고속도로 휴게소(2개소)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야산 정상부에 위치하여 인근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주민수:약891명) 및 휴게소(평균 이용객수:약 1일 4,500명)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발생된 연기 등으로 저기압시 구역질 등 질병 발생이 우려되며, 인근 지역의 마을 상수도과 근접한 지역(신양1리 380m, 신양2리 970m, 양산1리 540m, 양산2리 1,160m, 휴게소 상행 880m, 하행 230m 이격)에 위치해 있어 소각시설 용량 증가로 주변 환경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본 사업장 주변지역의 대기질 및 악취 조사 결과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6년 굴뚝TMS 조사결과 대기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어 현재 안전하게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시설 용량 증가에 따른 대기질 영향예측결과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며. 현재 가동중인 시설 및 신축시설도 방지시설(흡착시설, 사이클론, 먼지처리시설, 스크라바 등)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소각시 발생하는 연기는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 이므로 저기압시 구역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으며, 현재까지(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류 접수전 까지) 운영중에 구역질 및 질병발생으로 인한 민원은 없음. 또한 본 계획은 (주)디디에스 사업장의 기존 소각시설이 노후되어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비와 유지·보수를 하여도 효과가 크지 않아 최신 소각설립시설 도입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시행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되지 않으며, 굴뚝TMS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함.	반 영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원스톱민원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경우 규모에 따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건축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존 건축물을 자원순환관련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경우 규모에 따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건축허가 및 신고를 하겠으며, 기존 건축물을 자원순환관련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겠음.	반 영
	○건축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사전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여야 함	○건축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사전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도록 하겠으며, 같은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공작물축조신고를 하도록 하겠음.	반 영
	○별곡창업단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규정에 의거 제조업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토지관리과	○토지이동이 수반될 경우 인허가 사항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라 분할 및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토지이동이 수반될 경우 인허가 사항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라 분할 및 지목변경을 신청을 하도록 하겠음.	반 영
사회적경제과	○광업권 출원 없음(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
농정과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법률 제10조 (농어업자원 보전 및 환경개선)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토양오염의우려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본 사업장에 대해 충청남도 환경관리과에서 실시한 충청남도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저촉사항 없으며, 향후 최신 소각시설 교체 시에도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음.	반 영
산림공원과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안전총괄과 (논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요청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및 「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검토위원회)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를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검토되었으니 협의 의견서에 부합되도록 검토서를 재작성하여 검토위원 협의(확인서명) 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수정본과 조치계획 및 이행계획서를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협의 의견서에 부합되도록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재작성하여 검토위원 협의(확인서명) 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수정본과 조치계획 및 이행계획서를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 하겠음.	반 영
	- 본 사업은 행정계획단계로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의 재해예방과 관련된 사항이 검토, 협의되는 것이므로 제시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며, 향후 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에 제시된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466-8번지 일원에 계획된 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은 행정계획 단계로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의 재해예방과 관련된 사항이 검토, 협의되는 것이므로 제시한 사항이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실시 계획 시 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에 제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반 영
	- 또한 본 사업은 논산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 처리시설)결정(변경)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사업의 입지로 인한 대상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재해발생현황 및 주변탐문조사 등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대상지는 주변이 공장시설이 입지하므로 과거 화재 등의 피해 이력도 포함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최종하천(갑천)까지 배수체계를 도면으로 제시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한 주변 현황 및 재해피해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음.	반 영
	- 행정계획에서 검토되지 못한 세부 관련사항은 향후 계획될 실시계획인가시 철저히 검토되어야 함	- 행정계획에서 검토되지 못한 세부 관련사항은 향후 계획될 실시계획인가시 철저히 검토 하겠음.	반 영
	- 세부의견은 위원 검토내용을 참조바람	- 세부의견은 위원 검토내용을 참조하도록 하겠음.	반 영
	- 개발중 및 개발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과정에서 예측·검토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예측 부적정 등으로 주변지역의 재해영향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별도의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재해발생피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여야 함.	- 개발중 및 개발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과정에서 예측·검토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예측 부적정 등으로 주변지역의 재해영향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별도의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재해발생피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음.	반 영
	○세부의견 - 농지, 산지지역으로 사면안정성 확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집중호우시 우수 및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지역의 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우수배수가 원활하도록 하여야 함	- 집중호우시 우수 및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지역의 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개발 중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붕괴 우려가 있는 인공사면에 대비한 비탈면 가보호망(PE필름 등)설치를 계획하였음. 또한, 개발 후 사면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닐 등의 덮개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우수계획을 통하여 우수배수가 원활하도록 계획하였음	반 영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안전총괄과 (논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 주변지역 우수흐름을 표현하여 유역 구분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바람	-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지를 포함하여 홍수유출량 등이 사업대상지로 유입하는 주변지역까지 검토대상지로 설정하였으며, 주변지역의 우수흐름을 표현하여 유역 구분의 타당성을 제시하였음.	반 영
	- 사면 녹화공법을 수립할 것	- 추후 개발사업 시 사업 부지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사면 녹화공법을 수립하겠음	반 영
	- 홍수 및 토사유출량 저감을 위한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등의 임시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사면발생에 따른 불안정 사면이 예상되는 곳은 덮개 등을 설치하여 사면을 보호하기 바람	-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사면 발생에 따른 불안정 사면이 예상되는 곳은 가마니, 비닐 등의 덮개를 설치하겠음.	반 영
	- 공사시 가배수로 계획 철저	- 공사시 가배수로 계획을 철저히 하여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음.	반 영
	- 개발로 인한 피해는 배수구역별 홍수 및 토사유출량을 산정하여, 적정한 저감대책을 통해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계획	- 배수구역별 홍수 및 토사 유출량을 산정하여 개발 중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개발 후 우수(우수관로, 집수정)계획 및 L형 옹벽을 계획하였음.	반 영
	- 재해영향평가항목에는 없으나 추후 공사완료 후 공장 운영시 냄새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탈취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	- 추후 공사 완료 후 공장 운영 시 냄새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음.	반 영
	- 행정계획 단계이기는 하지만, 가용한 모든 자료를 활용한 입지의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고, 개발사업 시행시 예상되는 저해요인 검토 및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주요 검토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가용한 모든 자료를 활용한 입지의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고, 개발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재해요인 검토 및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주요 검토 방향을 제시하였음.	반 영
	- 사업부지와 아무 공학적인 근거없이 주변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각종 검토를 수행하여 세부검토의견에서 지적한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공동검토항목 중 1)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 9) 대상지역의 입지 적정성 분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현장조사와 탐문조사를 바탕으로 계획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및 상위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계획대상지의 입지 적정성을 분석하였음.	반 영
	- 특히, 사업부지가 논산시 관내에서 산지지역에 해당하는 벌곡면에 위치하며, 사업을 시행할 경우 남서측 부지경계에 최대 8m 정도의 절토사면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면재해 발생위험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검토가 전무하여 사면재해 발생가능성과 저감대책에 대한 검토가 미흡함	- 부지정지로 인한 사면발생이 불가피 하여 옹벽을 계획하였으며, 차후 실시설계 시 옹벽의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사면재해 발생가능성 및 저감대책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겠음.	반 영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안전총괄과 (논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와 주변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표고 및 경사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사업부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 함 - 즉, 홍수와 토사유출 관점에서는 유역개념으로, 사면재해와 관련해서는 사면붕괴시 사업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지역과 사업부지의 사면붕괴시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지역이 모두 분석대상지역에 포함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표고 및 경사분석을 재실시하였음. 또한, 현장조사를 통한 사면붕괴에 따른 예상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최소 지역으로 범위를 선정하여 검토하였음.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용지에 대한 재해예측 및 평가에서 사면재해에 대한 평가는 사업부지의 현 지형이 아니라 계획비탈면과 사업부지 주변의 비탈면을 부지 횡단면도에 따르면 향후 사업시행시 사업부지 확장을 위해 절토 후 토사비탈면과 L형 옹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임으로, 부지조성계획에 근거한 검토가 필요하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사면의 경우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식생 상태, 토성 등을 고려하여 재해취약성을 평가하도록 되어있는 지침에 따라 검토하였으며, 서측 경계에 계획되어져 있는 옹벽에 대하여 차후 실시설계 시 옹벽의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사면재해 발생가능성 및 저감대책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겠음.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사업시행시 가장 높은 절토비탈면이 조성되는 사업부지 서측 경계에 위치하는 산사태 위험1등급 지역이 붕괴할 경우 사업부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는 산사태 위험등급은 높지 않은 지역(3~4등급)으로, 급회 사업으로 발생하는 비탈면에 대해 녹화공법을 적용하여 비탈면 안전처리를 계획하였음. ※ 산사태 위험등급 1~2지역은 사업지구 외 지역으로 과거 재해이력(산사태 발생이력 및 취약지역 관리 현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유출 해석을 위한 도달시간 산정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유입시간을 구하고, 유하시간은 적용하지 않았다고 기술(p.4-38)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부지가 공장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사업 전에는 우수관로와 같은 배수시스템을 통해 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개발 중에는 공장 건물을 철거한 상태로 표면유출 또는 가배수로를 통한 유출이 예상됨 - 따라서, 유입시간만으로 도달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사업부지의 유출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도달시간을 계산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전 계획대상지 내 우수관로 및 개발 중 가배수로 등에 따른 유출에 대해 개발중 가배수로 등에 따른 유출에 대해 도달시간을 재산정 하여 제시하였음.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유출량을 단위도법을 통해 산정하였으나, 유역면적이 0.01km²에 불과하고 진술한 바와 같은 개발 전과 중의 유출특성을 고려할 때 단위도법의 적용은 부적절함. 즉, 우수관로를 통한 유출 또는 표면유출 해석에 적합한 방법을 채택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ark 단위도법과 같은 단위도법이 아닌 합리식과 비홍수량법을 산정하여 홍수유출량을 비교하였으며, 지역성을 가지지 않고 비교적 객관적인 방법으로 『설계홍수량 산정요령(2012, 국토해양부)』에서도 제시한 Clark 유역추적법을 채택하였음.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RCS합성단위도법, Nakayasu중합단위도법, Clark유역추적법은 자연하천 유역의 홍수량 산정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도시유역 적용에 가능하다는 기술(p.4-39)은 부적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계획대상지는 산지지형에 위치한 공장부지로 도시유역은 아니며 검토서에 제시한 NRCS 합성단위도법, Nakayasu 중합단위도법 그리고 Clark 유역추적법은 “도시유역에도 적용 가능한”공식이란 것을 표현한 것임 	반 영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안전총괄과 (논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 검토대상 토사유출량은 사업부지로 유입한 후 사업부지를 거쳐서 유출되는 양과 사업부지에서 발생하는 양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토사유출해석은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되며, 사업부지가 포함된 유역개념으로 검토대상지역을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함	-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대상지를 포함하여 토사유출량 등이 계획대상지로 유입하는 주변지역까지 검토대상지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음	반 영
	- 검토대상을 사업부지로 국한하여 공동검토 항목 중 “1) 지형조건 및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와 “9) 대상지역의 입지 적정성 분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대상지와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지형조건 및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와 대상지역의 입지 적정성 분석을 실시하였음	반 영
	- 세부항목 “예정용지에 대한 재해예측 및 평가”의 검토의견과 같은 사유로 공통검토항목 “11) 사면 및 기반재해 발생가능성과 저감대책에 대한 검토”가 미흡함	- 현재 계획대상지는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서 추후 시공 시 절취에 의한 지층 및 형상이 상이하여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비탈면 안정성 검토를 통하여 비탈면안전성을 확보하겠음.	추후반영
	- 행정계획 단계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상기한 사유로 호우재해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은 공학적인 관점에서 의미가 없으므로 사업부지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강우와 토사유출 해석을 재실시하거나 개발사업 시행시 검토, 반영할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추후 개발사업 시 사업 부지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강우와 토사유출 해석을 재실시하겠음.	추후반영
	-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입지의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의해 개발사업 시행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과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시 검토,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추후 개발사업 시 사업 부지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강우와 토사유출 해석을 재실시하겠음.	추후반영
	- 굳이 적절치 못한 방법과 신뢰할 수 없는 수치에 근거하여 침사지와 같은 저감시설을 계획할 필요는 없음, 급회 검토서와 같이 행정계획 단계에서 정량적인 분석을 시행하고 저감시설을 계획한다면 굳이 개발사업 단계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시행할 이유가 없음을 유의하기 바람	- 추후 개발사업 시 신뢰할 수 있는 공사계획을 바탕으로 침사지 등의 저감시설을 계획하도록 하겠음	반 영
	-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466-8번지 일원에 계획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은 행정계획 단계로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의 재해예방과 관련된 사항이 검토, 협의되는 것이므로 제시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며, 향후 실시 계획시 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에 제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466-8번지 일원에 계획된 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은 행정계획 단계로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의 재해예방과 관련된 사항이 검토, 협의되는 것이므로 제시한 사항이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실시 계획 시 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에 제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반 영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안전총괄과 (논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 특히 배수체계(최종하천까지)의 명확한 제시와 입지단계의 적정성을 고려하는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인 만큼 자세한 현장 조사와 주변현황 그리고 재해피해(주변이 공장인 특성을 고려한 화재 피해)등의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됨	- 최종하천(갑천)까지 배수체계를 도면으로 제시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한 주변 현황 및 재해피해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음.	반 영
	- 협의대상유형별 관련 검토항목을 작성하여 제시필요	- 협의대상 유형별 검토를 제시하였음.	반 영
	- 배수체계는 사업지구와 사업지구가 속한 주변지역의 배수체계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이를 도면화 하기 바라며, 관련시설의 사진, 배수시설 규격 등을 제시하기 바람. 특히 사업지구 우수가 마을지역으로 배출됨에 따라 갑천까지 유입되는 각 주요지점의 현황 제시 필요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최종하천(갑천)까지 배수체계를 도면으로 제시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한 주변 현황을 조사하였음.	반 영
	- 현황실측도상 증설부지는 공장지역으로서 표고분석, 경사분석에서 분석 제시된 사항과 맞지 않음(재분석필요)	- 표고 및 경사를 재분석하여 제시하였음.	반 영
	- 사업지구 서측은 호남고속도로 인근의 계곡부와 접해있으며, 계곡부를 통해 주변지역 우수가 배출되는 지역으로서 향후 공사시 사업지 토사류로 인해 고속도로 계곡부(사업지 서측) 및 주변마을(동측)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계획대상지는 호남고속도로 계곡부와 접해있으나 계획대상지 내 유수는 동측으로 흘러서측 계곡부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사 및 홍수유출량으로 인한 영향이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 시 동측에 영향이 없도록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반 영
	- 주민탐문조사는 되도록 마을지역에 10년이상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바람 또한 현지역은 주변에 공장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화재 등의 이력도 포함시켜 조사하기 바람	- 10년이상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화재 등의 이력을 포함하여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제시하였음.	반 영
	- 논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도 등을 확인하고, 관련도면에 사업지구를 표기하기 바람 (제시된 그림은 논산시 저감대책 위치도가 아님)	- 논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도를 사업지구 표기하여 수정하였음.	반 영
	- 향후 실시계획 인가시 현재 존재하는 인공비탈면의 범면 복구등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기 바람	- 향후 실시계획 인가 시 인공비탈면안정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추후반영
	- 제시된 인공비탈면 표는 현상황에 맞게 재작성 필요	- 급경사지 위험지역 검토를 현 상황에 맞게 작성하여 제시하였음.	반 영
	- 사업지구 입구 인근의 석축 시설 등 인공구조물에 대한 급경사지 평가표 작성 필요	- 사업지구 입구 인근의 석축 시설 등 인공구조물에 대한 급경사지 평가표를 작성하였음.	반 영
	- 유역의 설정은 현재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이 공장지역임을 고려하여 유역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주변공장지역의 배수체계를 검토 후 유역설정 필요)	- 주변지역이 공장지역임을 감안하여 주변의 배수체계를 검토 후 유역을 재설정하였음.	반 영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안전총괄과 (논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 CN 산정, 홍수량 산정 등은 개발후 내용을 제시하기 바람(현재 토지이용계획이 제시되어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개발후 산정이 필요)	- 행정계획 단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입지의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의해 개발사업 시행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과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시 검토·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사안으로 개발 후 산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미반영
	- 가장 기본이 되는 원단위법과 산정된 토사유출량을 비교 제시바람	- 원단위법과 토사유출량을 비교 제시하였음.	반 영
	- 산정된 토사유출량 7.5로 산정되었으나, 제시된 임시침사지 토사조절부 용량은 38.91로 산정된 값이 과하다 판단됨	- 필요수요면적 포착대상입경 0.1mm (포착률 100%)를 대상으로 최소 소요수면적(필요소요수면적)을 산정한 결과로 퇴사지류부 상부(깊이 0.6m)면적이 최소 수요면적보다 커야 하며, 그에 따른 용량을 산정하여 임시침사지 제원을 제시하였음. 또한 우수계획을 바탕으로 관로 시공시 관로 직경 터파기 등을 고려한 규격이면 추후 공사 및 우수계획 등 실시설계를 상세히 반영하여 제시하겠음.	추후반영
	- 토사유출량 산정 및 침사지 산정 그리고 사업유역에 비해 가배수로 시설의 규격이 과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시계획시 상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하기 바람		
	-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사업으로 인한 개발후 유출량이 증가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으로 인한 유출량의 저감계획을 수립함이 바람직함(예를 들어 주차장 투수성 포장 등)	- 차후 개발사업 시 개발 후 우수유출량이 증가될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음.	추후반영
	- 제시되는 배수흐름은 정확하게 표현바람(실제 우수가 표기된 것처럼 선형으로 나가는 것인지?)	- 최종하천(갑천)까지 배수체계를 도면으로 제시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한 주변 현황을 조사하였음.	반 영
	- 주변지역의 배수체계, 관거 규격, 현장사진 등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함(갑천까지)		
희망마을 건설과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
도로교통과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상 도로구역이 아니므로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제19조 등 관련법령 및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법」 제19조 등 관련법령 및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적합하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음.	반 영
맑은물과	○공공하수처리 외 지역으로 하수도법 저촉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며, 상수도법 저촉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지하수를 개발·이용시 사전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여야 함 ※변동사항이 있을시 재협의 바람	○지하수를 개발·이용시에는 사전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으며, 변동사항이 있을시에는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	반 영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별곡면사무소	<p>※ 별곡면 주민의견(총 174명)</p> <p>○별곡면 신양리 소재 ‘병원폐기물 처리시설 (디디에스)’의 신설(증설) 반대함</p>	<p>○당사 사업장과 가장 인접한 신양3리 마을 이 장을 비롯한 44명의 주민들은 당사의 노후화 된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새로운 소각시설로 교체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음. 이에 신양3리 에서 동의서를 작성하여 논산시청에 제출하 였음. 거리상 가장 인접하며 당사 사업장을 중심으로 여타 다른 마을은 당사 사업장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며, 신양3리만이 당사 사업장의 굴뚝이 일부만 보이는 만큼 당사의 급변 기계교체에 대하여 가장 큰 관심을 가 지고 당사와 함께 당사의 동종업체 견학을 통해 직접 교체되는 소각시설의 운영현황 일 체와 장점을 듣고 보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현재의 소각시설보다 교체되는 소각시설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p>	미반영
	<p>○저기압시(새벽, 우천시) 연기가 인근지역 지 면 가까이 흩어져 역한 냄새와 분진으로 농 작물에 그늘음이 앉아서 상품가치가 없어질 뿐더러 인근 고속도로 상·하휴게소에서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등 악취와 분진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음</p>	<p>○당사와 논산시청 간의 행정소송[도시관리계 획(폐기물처리시설)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 (이하 ‘행정소송’이라 칭함.) 제1심 판 결문 P.9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당사는 당사 사업장 최종 배출구인 ‘굴뚝에 TMS(Tele Metering System, 배출가스 원 격측정체계) 설비를 갖추고 있어 소각로 및 대기오염방지 시스템과 연동하여 동작시키 면서, 한국환경공단에 자동으로 실시간 오염 도가 전송’되고 있으며 이는 변경되는 소각 시설에도 동일하게 설치되어짐. 이에 가령 주민들이 본 협의의견과 같이 역한 냄새와 분진, 악취, 수확한 농작물이 검게 보이는 현상, 암 투병자 발생 등과 같은 피해사실이 실존할 정도라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는 당사와 같은 소 각업체들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이미 폐쇄명 령을 받아 운영이 불가능 함.</p> <p>또한, 위 TMS뿐만 아니라 당사는 각 관할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지도, 점검, 단속을 받고 있고, 당사의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입안 제안시기인 2013년과 2014년 에는 제1심 판결문 중 P.12와 P.13에서 “금 강유역환경청과 논산시는 2013년과 2014년 에 수시로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배출시설 지도점검, 폐기물 처리업 체 지도점검,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정 밀지도점검,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 지도점검, 굴뚝TMS부착 사업장 지도 점검 등을 하였는데,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거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결 과를 확인하였다.”</p>	-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별곡면사무소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3. 10. 14.과 2013. 12. 6. 원고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복합악취검사를 하고 모두 적합 판정을 하였다.” ‘충청남도지사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2015. 3. 18. 원고 사업장의 대기오염도 및 토양오염도 검사를, 2015. 4. 15. 원고 사업장의 복합악취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모두 허용기준에 적합하였다.’ 와 같이 평상시와 입안을 제안한 시기와 맞물린 특정 시기의 수시 지도, 점검, 단속에서도 모두 적합판정을 받고 특이사항 없이 운영해왔음으로 협의의견과는 상반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얻었음.	
	○공업용수를 확보하지 않아 인근 하천수(갑천)를 불법이용하고 있음	○용수의 확보는 사업주가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 당사는 별곡창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논산시청에서 창업단지 내 업체들을 위하여 개발하여 둔 공동관정을 이용하여 운영 중에 있고, 양수능력은 당사의 소각시설 교체 후에도 충분히 확보되어있고, 또한 당사 사업장 부지 내에서도 지하수 개발이 가능하며, 논산시에서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용수의 확보방안은 충분함. 인근 하천수를 이용하고 있지 않음.	-
	○반대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주민을 겁박하고 집단행동을 와해 시켜왔음 ○주민들의 반대현수막 때문에 거래처가 줄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음	○가칭 ‘DDS반대추진위원회’의 주도아래 이루어진 반대 현수막 설치는 당시 그 수가 약 80여개에 이르렀으며, 그 내용 역시 상당히 극악하였고, 많은 언론사를 통하여 당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당사의 ‘도시계획시설입안(폐기물처리시설)’의 미반영 사유로 적용되었고, 이에 당사와 계약관계에 있던 많은 수의 병원이 당사가 곧 폐쇄, 혹은 영업정지등으로 인한 의료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에 대한 부족함을 근거로 당사와의 계약해지, 계약연장 거부, 등을 밝혀와 그 피해는 실존하였으며, 당시 행정소송은 당사로서는 사활이 걸린 소송이었고, 이 행정소송에 가칭 ‘DDS반대추진위원회’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당사 행정소송상에 불리한 영향을 끼쳤음. 이후 행정소송 제2심 승소판결이 나온 후 2016. 6. 20. 손해배상소송을 조건 없이 소 취하 하였음.	-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별곡면사무소	○디디에스에서는 일부 공장신축에 반대하는 소수주민이 면민 전체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님	○당사와 논산시청의 행정소송 진행 중 재판부와 관계 기관에 제출된 탄원서 및 의견서의 작성인과 각 관계기관에 제기한 민원의 신청인, 각종 언론의 제보자, 당사 부지 앞에서 시행한 집회의 집회신고인과 집회 주도인이 모두 가칭 'DDS반대추진위원회'의 소수 인원으로서 모두 같았음. 이에 제출된 탄원서와 의견서에 서명한 서명인원 전원을 대상으로 제출된 탄원서와 의견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냐는 내용과 서명한 사실 자체가 있는지 여부와 혹시나 내용을 모르고 서명한 인원이 있다면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보낸 의견서에 상당수의 주민들이 탄원서와 의견서의 내용자체를 모르고 이름과 서명만 해달라고 하여 서명하였으며 이에 취소한다는 의견의 의견서가 회신되어 왔으므로 일부 소수 주민이 각 마을 이장들에게 서명을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하지 않았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 다른 여러 상황에 비추어 일부 인원이 주민들을 선동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지역단체에게 후원명목으로 수년간 1억4천여만원을 찬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수취한 단체는 없고 대부분 허위적 대상과 금액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지역주민을 농락하고 있음	○당사가 2004년도에 신규 설치 이후 2006년도부터는 주민들과 소통을 통한 교류를 활발히 하여 각 단체와 개인에게 찬조해온 것은 사실이며, 당사는 논산시청과 진행 중이었던 행정소송에 찬조금 내역을 제출하면서 각 단체와 개인의 단체명과 성명을 삭제하고 제출하였으나, 가령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고 대외로 유출되지 않는다면 각 단체명과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 이는 찬조를 받았던 단체나 개인의 사생활보호의 중요함도 있었고, 또 이를 알게 된다면 마을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 될 것이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출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논산시청에서도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찬조내역 전체를 공개할 수 있음. 또한 찬조금을 수령한 단체와 그 행사는 별곡면 체육대회와 주변 마을 농수로 청소작업 등과 같이 허위적 대상이 아닌 실존하는 공인된 것이었음.	-
	○별곡면은 청정지역이었으나 각종 환경오염시키는 공장이 유치되어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상실됨	○별곡면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3개소와 주물공장 등이 이미 상존하고 있으며, 당사는 약 18년간 가동한 노후화된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최신식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하려 하고 있어 현재보다 오히려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어 주변 환경의 공익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예상됨.	-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별곡면사무소	○의료폐기물은 혈액, 체액, 태반, 인체조직의 적출물, 사체, 주사기, 거즈 등 각종 의료폐기물을 소홀히 관리될 경우 인체감염이 우려되고 환경을 훼손하기 때문에 특별관리가 필요한데도 디디에스는 여러 종류의 법적기준을 위반하여 연간 178회(2012~2013년)의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는 업체임	○당사는 1999년 최초 가동개시이후부터 현재 까지 의료폐기물을 소홀히 관리한적이 없음. - 의료폐기물은 제시된 협의의견과 같이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환경청, 논산시청 등의 특별관리를 받고 있으며 최종 배출구인 굴뚝에는 TMS설비가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환경부로 그 내용이 전송되고 있으며, 협의의견에서 밝히고 있는 178회의 부과금 내역은 법적 기준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이 아닌 각 가스 성분에 산소비를 공급한 비율로 일시적인 산소수치의 증가로 인한 부과금으로서 행정소송 제1심 판결문 P.13에서 보듯이 “한편 충청남도지사가 2013년도 하반기에 17개 업체의 1,838회 위반행위에 대하여 TMS초과배출금으로 부과한 총 금액은 36,820,020원이다.”처럼 대다수의 굴뚝을 소유한 업체는 납부하고 있는 부과금이며 P.17의 ⑦에서 보듯이 “원고가 이전에 부과받은 초과배출부과금은 충청남도지사가 부과한 총 금액에 비추어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와 같이 당사의 위반정도는 타 업체에 비추어 오히려 경미하게 운영하고 있음.	-
	○별곡면 주민들은 공장신설 당시에도 수차에 걸친 반대 시위와 현수막 게시, 관계기관에 탄원서와 진정서 제출, 반대시위 개최, 반대 현수막을 통한 주민의견 공시 등을 통해 병원폐기물 처리시설 반대하는 노력을 하였음	○당사가 최초 현재의 위치로 이전할 당시에는 반대를 하였으나, 가동을 개시한 이 후부터는 주민들과 원활한 교류를 하여 왔고, 제1심 판결문 중 P.13 사)항에서 보듯이, “‘원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악취, 분진, 연기로 건강상 피해가 있다. 원고사업장에서 폐수를 하천으로 불법 방류하는 의심이 든다.’는 등의 민원신고를 받았는데,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확인한 후 ‘배출되는 연기는 육안상 양호하였으며, 악취는 느끼지 못하였다. 사업장 주변에서 악취를 측정 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였다.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처리결과를 작성하였다”와 같이 반대민원에 대해서도 모두 적합한 결과를 받았음.	미반영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별곡면사무소	<p>○별곡면 주민은 공장증설 결사반대, DDS 추방, 면민에 사죄, 주민투표 추진을 요구함</p> <p>○별곡면 주민들은 디디에스에서 불과 몇 명이 주민을 선동하고, 공장신축시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고, 주변지역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디디에스 공장신축에 대하여 별곡면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함</p> <p>○디디에스 공장신축에 대하여 별곡면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함 (디디에스측도 대다수의 주민이 공장신축을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주민투표를 거절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봄)</p>	○당사는 1999년도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기업의 생존권에 따라 보호받아야할 권리가 있으며, 사죄 요구에 대하여는 당사의 잘못이 있다면 즉시 사죄할 용의가 있음. 또한 당사의 사죄로 주민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된다면 즉시 사죄할 용의가 있음. 다만, 당사와 같이 전국에서 가동 중인 16개소의 의료폐기물처리업체가 소각시설을 교체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한 사례는 단1차례도 없음.	미반영
	○디디에스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소각로는 연기, 분진 등은 걸러질지 모르지만 다이옥신 같은 화학성분은 걸러내지 못하고 방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제1심 판결문 P.12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은 2013. 10. 11. 원고 사업장의 소각시설 배출가스를 시료로 하여 다이옥신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측정된 다이옥신 농도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 5ng-TEQ/Sm ³ 보다 낮은 1.626ng-TEQ/Sm ³ 이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현재의 노후화된 소각시설에서도 다이옥신의 배출허용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데, 이는 각종 방지시설과 다양한 가스저감을 위한 필수약품 등의 사용으로 공정상의 절차를 거쳐 나오는 결과로서 발생하는 가스는 모두 제거되고 있음.	-
	○디디에스 공장이 신축된다 해도 오염물질을 걸러내지 못하고 공기 중으로 배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로 설치하려고 하는 소각로는 다이옥신 같은 화학성분은 걸러내지 못하고 방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신설되는 소각로는 제1심 판결문 P.16에서 보듯이 “이 사건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무관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이 이미 피고나 인근 주민들 입장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 중간 처분업 변경허가를 한 점,”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의 노후화된 소각시설로도 다이옥신의 배출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P.17에서는 “오히려 원고로 하여금 노후화된 시설로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영위하게 하는 것이 주민과 환경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현재의 소각시설을 계속 운영할 경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이며, 같은 P.17에서 “노후화 된 폐기물 처리시설의 교체로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번 소각시설의 교체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부분 개선하여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법원에서도 판단한 바 있음.	-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별곡면사무소	○청정 별곡지역인 우리 면에 환경오염 시설인 병원적출물 DDS 공장이 설치되어 환경 파괴 및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모두는 DDS 증축을 반대하기에 주민 의견서를 제출함. 또한 DDS 공장이 주민들이 피해없는 지역으로 이전하기를 희망함	○가령 폐기물처리시설이 신규로 입주하는 사안이라면 이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나, 당사는 현재의 위치에서 이미 약 14년간 운영해오고 있는 업체로서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의 시설을 계속 운영하게 하는 것보다 새로운 소각시설로 교체하는 것이 현재보다 주변 환경에 더욱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임. 또한 당사의 소각시설의 교체로 인한 소각용량의 증가는 제1심 판결문 P.2에서 보듯이 “당시 시행되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3. 12. 31. 환경부령 제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6항, 별표 7에 따라 시간당 처분능력 1t 이상의 소각시설을 갖추어야 했다” 와 P.16 “① 원고는 기존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교체하면서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각시설의 시간당 처분능력을 1t 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처리시설의 증설이 부득이한 면이 있는 점”과 제2심 판결문 P.2에서 보듯이 “제28조 제6항, 별표 7에 따르면, 이러한 신설의 경우 시간당 처분능력 1t 이상의 소각시설을 갖추어야 했다.” 와 P.3에서는 “소각시설 신규 설치 시에는 폐기물 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각시설의 시간당 처분능력을 1t 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처리시설의 증설에는 부득이한 면이 있는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새로운 소각시설로 교체 시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며, 소각시설의 용량증가로 인한 대기가스의 ‘발생량’은 증가할지 모르나 P.4에서 보듯이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자체가 증가한다고 하여도 강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통할 경우 그 ‘배출량’은 기존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어, “라고 하고 있어 최첨단화된 소각시설의 전자동 공정화 등에 따라 현재보다 낮은 수치를 보일 것임. 또한 배출되는 양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현재와 동일, 혹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나. 입자형태의 물질 중 먼지부문에서와 같이 2015. 1. 1. 이후에 지어지는 소각시설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점(현재 20ppm -> 10ppm) 등을 보면 소각용량의 증가는 새로운 소각시설의 교체로 인하여 현재보다 더욱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미반영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별곡면사무소	○양산1리 마을은 직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 공기, 물 오염으로 주민건강이 제일 심각하며, 과일나무, 채소, 곡물이 수확하면 검은색으로 보임. 하루빨리 디디에스가 벌곡을 떠나야 주민이 살수 있다고 호소함	○공기, 물 오염으로 주민건강이 제일 심각하며, 과일나무, 채소, 곡물이 수확하면 검은색으로 보인다는 등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TMS설비가 갖추어진 업체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러 차례의 지도, 점검, 단속에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또한 양산1리 마을에서 혐의의견과 같은 피해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민원이 제기된 적도 없고 당사에 단 1차례의 항의도 없었음.	-
	○소각장 운영으로 생기는 공기, 대기오염 저기압 때 나타나는 악취, 농작물·집주변에 내려앉은 먼지로 주변 주민들의 암투병자가 속출하고, 업주의 주민들 간 불신감 조성, 불법운영으로 과태로 부과 등 굴뚝 연기만 보면 쌓이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병원적출물 소각장 증설은 적극 반대함	○소각장 운영으로 생기는 공기, 대기오염 저기압 때 나타나는 악취, 농작물·집주변에 내려앉은 먼지로 주변 주민들의 암투병자가 속출한다는 등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TMS설비가 갖추어진 업체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러 차례의 지도, 점검, 단속에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 당사는 불법운업을 한 적이 없고, 현재까지도 당사와 인접한 지역에 딸기, 인삼 등 농작물 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미반영
	○디디에스 공장이 1일 36톤 규모로 확장하여 신축한다는 소식에 별곡면민 모두가 수차례 반대집회와 삭발식 등 반대집회를 하고 있는 실정임.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세탁물이 더러워짐을 물론 먹거리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디디에스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공장증축 실시를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별곡면 주민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면민 모두의 찬성, 반대 투표를 실시하여 사실 규명을 하면 좋겠음 ○날씨가 좋아도 빨래를 마음놓고 못 넣고, 비가 오면 연기가 깔려서 냄새가 심함. 도시에 이산온다고 마을에 왔다 우뚝 솟은 굴뚝을 보고 그냥 떠남, 하루속히 말려주시기 바람 ○신양2리 마을 뒤편에 운영 중인 병원물 소각장에서 나오는 분진 및 냄새는 날씨가 흐린 날이면 더욱 심하여 불편을 호소하니 참고하시어 더욱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세탁물이 더러워지고 먹거리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등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TMS설비가 갖추어진 업체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러 차례의 지도, 점검, 단속에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또한, 가칭 ‘DDS반대추진위원회’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실제 당사와 주민들과의 대화의 기회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들의 집회에 대하여도 당사도 안타까운 실정임. 앞으로 오해를 풀기 위하여 노력하고 대화의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상기 별곡면 주민들의 의견은 당사가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해 갈 것이고, 또 당사도 앞으로 별곡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환경법규에 맞게 성실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미반영

[붙임 3]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주 민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p>※ 벌곡면 주민 총 380명 서명 제출</p> <p>○현재의 규모보다 4배 큰 공장을 짓는것에 대해 주민입장에서는 분노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음.</p>	<p>○당사의 소각시설의 교체로 인한 소각용량의 증가는 당사와 논산시청 간의 행정소송[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 (이하 ‘행정소송’이라 칭함.) 제2심 판결문 P.2에서 보듯이 “제28조 제6항, 별표 7에 따르면, 이러한 신설의 경우 시간당 처분능력 1t 이상의 소각시설을 갖추어야 했다.” 와 P.3에서는 “소각시설 신규 설치 시에는 폐기물 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각시설의 시간당 처분능력을 1t 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처리시설의 증설에는 부득이한 면이 있는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새로운 소각시설로 교체 시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며, 소각시설의 용량증가로 인한 대기가스의 ‘발생량’은 증가할지 모르나 P.4에서 보듯이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자체가 증가한다고 하여도 강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통할 경우 그 ‘배출량’은 기존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어,“라고 하고 있어 최첨단화된 소각시설의 전자동 공정화 등에 따라 현재보다 낮은 수치를 보일 것임.</p>	미반영
<p>○주민과 마찰이 없고 반대주민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주민이 공장건립을 찬성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일체의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허위주장 하고 있음.</p>	<p>○당사가 2004년도에 신규 설치 이후 2006년 도부터는 주민들과 소통을 통한 교류를 활발히 하여 각 단체와 개인에게 창조해온 것은 사실이며, 당사는 논산시청과 진행 중이었던 행정소송에 창조금 내역을 제출하면서 각 단체와 개인의 단체명과 성명을 삭제하고 제출하였으나, 가령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고 대외로 유출되지 않는다면 각 단체명과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 지금이라도 논산시청에서도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창조내역 전체를 공개할 수 있음. 또한 창조금을 수령한 단체와 그 행사는 벌곡면 체육대회와 주변 마을 농수로 청소작업 등과 같이 허위적 대상이 아닌 실존하는 공인된 것이었음.</p>	미반영

주 민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디디에스의 소각장이 부지경계에서 마을까지 100m 이내로 사실상 마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벌곡면 주민들은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용인 할 수 없음.	○행정소송 제1심 판결문 p.7에서 보듯이 당사와 가장 인접한 마을인 신양3리마을은 당사와 200m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행정소송 제2심 판결문 p.3에서 보듯이 “또한 주변의 산림에 의해 차폐되어 있어 그 북쪽의 신양3리 마을에서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의 굴뚝과 연기가 관측되는 것 외에는 산림 외부에서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이 관측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 당사 사업장을 중심으로 여타 다른 마을은 당사 사업장이 육안으로 관측되지 않음. 이에 당사와 가장 인접한 신양3리 마을 이장을 비롯한 44명의 주민들은 당사의 노후화된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새로운 소각시설로 교체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음. 이에 신양3리에서 기계교체에 따른 동의서를 작성하여 논산시청에 제출하였음.	미반영
○최신설비로 교체한다고 하지만 현재와 같이 마을에 인접한 장소에 시설을 신설한다면 불합리한 처사라고 판단됨.	○신설되는 소각로는 제1심 판결문 P.16에서 보듯이 “이 사건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무관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이 이미 피고나 인근 주민들 입장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 중간 처분업 변경허가를 한 점,”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재의 노후화된 소각시설로도 각종 배출항목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P.17에서는 “오히려 원고로 하여금 노후화된 시설로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영위하게 하는 것이 주민과 환경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번 소각시설의 교체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부분 개선하여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법원에서도 판단한 바 있음.	미반영
○벌곡면 소재지 및 벌곡초등학교에서 1km정도 떨어진곳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2곳, 마을상수도 5곳이 있어 이동중 2차 감염 위험 및 대기오염, 냄새 등 문제점 발생하고 있음.	○행정소송 제1심 판결문 P.9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당사는 당사 사업장 최종 배출구인 ‘굴뚝에 TMS(Tele Metering System, 배출가스 원격측정체계) 설비를 갖추고 있어 소각로 및 대기오염방지 시스템과 연동하여 동작시키면서, 한국환경공단에 자동으로 실시간 오염도가 전송’되고 있으며 변경되는 소각시설에는 디지털화되어 한층 강화된 TMS설비가 갖추어 질 예정이며 이는 2017년 10월 15일부터 가동 될 것임.	미반영

주 민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p>○위 TMS뿐만 아니라 당사는 각 관할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지도, 점검, 단속을 받고 있고, 당사의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 제안시기인 2013년과 2014년에는 제1심 판결문 중 P.12와 P.13에서 “금강유역환경청과 논산시는 2013년과 2014년에 수시로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배출시설 지도점검,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정밀지도점검,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지도점검, 굴뚝TMS부착 사업장 지도 점검 등을 하였는데,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거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결과를 확인하였다.”와 같이 평상시와 입안을 제안한 시기와 맞물린 특정 시기의 수시 지도, 점검, 단속에서도 모두 적합판정을 받고 특이사항 없이 운영해왔으므로 협의의견과는 상반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얻었음.</p> <p>○이동 중 2차 감염위험에 관하여는 의료폐기물의 수거, 운반은 냉각시설을 갖춘 전용차량을 활용하여 배출부터 입고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직접 관리 하는 CLEAN SYSTEM을 통하여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이에 당사가 가동을 개시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약14년 간 문제가 발생한 적이 단1건도 없음. 또한 이후에도 법규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겠음.</p> <p>○현재까지도 당사와 인접한 지역에 딸기, 인삼 등 농작물 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p>	
<p>○토양검사결과 허용기준치 가까운 오염수치가 나와 청정별곡 농산물 생산에 치명적이고 오염 피해가 나타나고 있음.</p>	<p>○행정소송 제2심 판결문 중 p.4에서 보듯이 “피고 측은 원고의 사업장으로부터 불소 등에 따른 토양오염이 발생하고 오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면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사업장으로부터 불소 등 토양오염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변경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외부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이어서 수질이나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오히려 토양검사결과로 인하여 당사 운영의 영향만으로 인한 직접적 관계가 없음이 밝혀졌음.</p>	<p>미반영</p>

주 민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p>○공단 내 있는 지하수는 공단 전체의 생활용수와 음용수로 논산시가 개발한 것으로 디디에스 측에서 공업용수로 사용하려면 논산시장 허가를 받아 용도 변경후 사용하여야 하며, 디디에스 외 업체들은 물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p> <p>○디디에스 공장 인근은 수차례 지하수 개발에 실패한 지역으로 지하수수원이 없는 지역으로 지하수개발 자체가 힘든 지역이며, 대형관정을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에 피해가 우려됨.</p> <p>○별곡면 설치예정인 상수도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고, 공용 지하수, 개발하지 않은 지하수, 존재하지 않는 상수도를 근거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허위계획이므로 철회되어야 함.</p>	<p>○현재 당사는 별곡창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논산 시청에서 창업단지 내 업체들을 위하여 개발하여 둔 공동관정을 이용하여 운영 중에 있고, 양수능력은 현재 운영 중에도, 또 당사의 소각시설 교체 후에도 충분히 확보되어있음. 또한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 11조 관련 별표4 지하수의 수질기준 비고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가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 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존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가 생활용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공업용수로 함께 사용하여도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신문고 유사질의에서도 당사의 의견과 같이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관련 별표4 비고 제2호에 의거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공동이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농. 어업용수 및 공업용수가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충족하면 사용 가능하므로 현재 당사 역시 별도의 신청과정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됨.</p> <p>○행정소송 제1심 판결문 P.23에서 보듯이 “원고 사업장 부지 내에서 약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1일 30m³ 이상의 양수 능력이 있는 지하수 관정 개발이 가능한 사실, 논산시는 2020.12. 준공을 목표로 논산시 별곡면, 양촌면 일대에 총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설치한 지하수 관정이나 스스로 개발할 지하수 관정, 또는 논산시가 추진하는 공급사업에 따라 설치될 상수도를 통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에 소요될 1일 33.6m³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와 같이 당사 부지 내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차후 상수도 보급계획이 확보되어 있고 이를 활용하여 당사의 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 용수확보방안이 충분히 확립되어있음.</p> <p>○또한, 별곡창업단지 내 입주업체들의 협의회를 통해 관정 용수 사용에 대한 합의를 작성하였으며, 합의 내용 중 용수 부족시에는 본사에서 책임지고 용수를 공급하여 줄 것으로 합의 하였음.</p>	<p>미반영</p>

주 민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디디에스 공장 설립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찬성하면 공장설립하고,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면 될 것임.	○당사와 같이 전국에서 가동 중인 16개소의 의료폐기물처리업체가 소각시설을 교체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한 사례는 단1차례도 없음.	미반영
○헌법 제 10조 및 제35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라고 적시하고 있어 별곡면 주민에게도 적용되는 높은 권리하고 판단됨.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와 같이 현재보다 더욱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노후화된 운영시설을 최신시설로 교체하여 주변 환경을 더욱더 쾌적하게 만들고자 함. ○또한, 당사는 현재의 위치에서 이미 약 14년간 운영해오고 있는 업체로서 현재의 시설을 계속 운영하게 하는 것보다 새로운 소각시설로 교체하는 것이 현재보다 주변 환경에 더욱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임.	미반영
○별곡면 주민들은 지난 10여 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험한 바, 의료폐기물 소각장 매연 등 나쁜 공기 질로 인한 건강의 위협을 받아 왔으며, 그을음 등으로 각종 농산물이 오염되어 경제적 손해를 입어 왔음.	○본 사업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말은 허위에 해당하며, 경제적 손실에 따른 어떠한 민원제기도 없었으며, 오히려 현재까지도 당사와 인접한 지역에 딸기, 인삼 등 농작물 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미반영
○공장 설치와 관련된 법을 떠나 주민의 ‘행복추구권, 환경권’을 먼저 고려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진행되는 시점부터 별곡면 주민대표와 각 단체장은 단식투쟁 할 것을 결의함.	○주민의견에서 같이 법을 떠나서, 본 사업장은 이미 약 14년간 운영해오고 있는 업체이며, 기업의 생존권에 따라 보호 받아야 할 권리도 있으며, 기존 소각시설 노후화에 따라 각종 허용기준에 적합한 최신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을 더욱더 쾌적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이 아닌 지역이기주의(님비현상)에 해당함. ○따라서, 본 사업장이 신규 입지하는 시설이 아닌 기존 운영중인 업체이고, 최신 소각시설 설치를 통해 기존보다 더욱더 엄격하게 환경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 질 것임.	미반영
○디디에스 증축 결사반대, 현재 운영중인 디디에스는 즉각 별곡을 떠나고, 청정별곡에 대한 환경오염도를 장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 바라며, 전염병 걱정 없는 건강한 별곡에서 살고 싶음.	○당사는 현재의 위치에서 이미 약 14년간 운영해오고 있는 업체로서 현재의 시설을 계속 운영하게 하는 것보다 새로운 소각시설로 교체하는 것이 현재 보다 주변 환경에 더욱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최신 소각시설 설치에 따라 기존보다 더욱더 엄격하게 관리 감독이 이루어 질것임.	미반영
○의료폐기물 소각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문제(두통, 호흡곤란), 토질오염에 따른 농산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본 사업장으로 인해 농산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본 사업장에 대해 충청남도 환경관리과에서 실시한 충청남도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저촉사항 없으며, 향후 최신소각시설 교체 시에도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오히려 현재까지도 당사와 인접한 지역에 딸기, 인삼 등 농작물 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금번 기계교체에 따른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민들과의 화합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아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 역시 준비되어 있음.	미반영